

해방 6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

- 출처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저자 :
- 발행일 : 2005년 8월 2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진보는 환상이다

- 해방 60년에 대한 역사성찰과 미래 역사선택에 대하여

박 승 옥

시민발전 대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

1. 진보는 환상이다

진보는 환상이다. 진보사관, 발전사관은 허망한 희망일 뿐이다. 더더구나 보수는 더러운 욕망이거나 추악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는 발전한다는 생각, 역사는 진보한다는 이념에 대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고해보아야 한다. 역사는 일직선이거나 나선형이건 어쨌든 퇴행과 정체와 도약을 거듭하면서 발전 진보한다는 이른바 발전사관, 진보사관은 진화론을 사회이론과 역사이론에 잘못 적용한 이론이다. 정확히 말하면 진보사관은,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선 진보라는 개념은 18세기 볼테르, 콩도르세 등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아주 최근의 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 인간 행위의 적극성과 역동성을 표현하던 이 진보라는 단어는 19세기 생물진화론과 결합하면서 드디어는 근대 유럽의 확고부동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마르크스주의가 있었다.

진보는 초기부터 인간을, 그것도 백인종을 진화의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인종편견과 인종차별의 개념으로 출발했다.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하는 고정관념은 인류를 맨 꼭대기 가지에 올려놓고 그런 역원뿔형의 진화 나뭇가지 그림이 상징하듯 아주 뿌리가 깊고도 오래된 편견이다.

- 창조주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인간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전체 자연을 합목적적으로 지배하는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다.(칸트, 1790, 『전집』 8권 : 1968)(글쓴이 주: 여기서 칸트가 말한 인간은 물론 백인을 가르킨다!)
- 흑인들은 무척이나 허영심이 많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흑인식이다. 그들은 너무 수다스럽기 때문에 몽둥이질로 쫓아버려야 한다. (칸트)
- 질서는 신의 제1법칙이다. 그리고 이 법칙은 사람들의 일부가 나머지에 비해 우월하며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알렉산더 포프, 『인간에 대한 에세이』 : 1733)
- 왜 이 나라의 국민을 검게 물들여야 하는가.(벤자민 프랭클린, 『인류의 증기에 대한 관찰』 : 1751)
- 나는 흑인이 처음부터 다른 인종이었던 시대나 환경에 의해 차이를 갖게 되었든 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백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기하고 싶다.(토마스 제퍼슨, 1965)
-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육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평등의 이름 아래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영구히 불가능할 것이다.(링컨, 1858)
- 흑인의 평등이라고! 허튼 소리!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지배하는 위대한 신의 통치 하에서 언제까지 무뢰한들이 이따위 저속한 선동을 계속 외치려고, 천치들이 괴상한 주장을 떠들어댈 것인가.(링컨, 1859)
- 나는 흑인을 비롯해서 모든 인종이 일반적으로 백인에 비해 천성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데이비드 흄)

근대 생물분류학을 창시한 린네는 처음으로 인종을 정의하면서 호모 사피엔스 아페르(아프리카 흑인)는 변덕에 의해 지배되고 호모 사피엔스 유로파에스(유럽 백인)은 관습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프리카 여성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유방에서 풍부한 젖을 내며, 흑인 남성들은 게으름뱅이이며 기름으로 번들거린다고 덧붙였다. 또 프랑스에서 당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린, 근대 지질학, 고생물학, 비교해부학의 창시자인 조르주 퀴비에의 토착 아프리카 흑인은 “가장 퇴화된 인종으로 그 형태는 짐승의 그것과 흡사하며, 그 지능은 어느모로 보나 질서정연한 통치에 도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근대 지질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라이엘은 부시멘의 뇌는 유인원의 뇌로 이어진다고 쓰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인종차별과 편견에 가득 찬 진보 이념에 대해 그 증거를 찾고자 한다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보라.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서양 근현대의 유명 인사가 쓴 책 한 권을 들춰 때마다 이 같은 구절이 한 움큼의 서캐처럼 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진화론을 제창한 찰스 다윈은 진화라는 용어를 『종의 기원』 초판에는 쓰지도 않았을 만큼 처음에는 진화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쓰기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다

원은 더 고등하거나 더 하등하다고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를 향한 내재적 경향 같은 것은 없다고 고백할 만큼 결코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런 다윈조차 자신의 생각과 모순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19세기 유럽 지배계급에 속한 지식인으로서 진보의 이념을 때로는 주저없이 설파하곤 했다.

자연선택은 오로지 각 개체에 의해, 개체를 위해 작동하므로 모든 정신과 물질적 자질은 완성을 향해 진보되어 갈 것이다.

다윈의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어쨌든 진화라는 용어는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정식 생물학 용어가 되면서 영어의 일상용법에서도 진보를 뜻하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한 유럽의 물질문명 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이 바로 진보이자 역사의 필연이라고 확신한 시대였다. 사회주의 운동은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진보와 필연을 역사유물론이라는 법칙으로 제시하고 전 세계를 유럽으로 바꾸어버리는 자본주의를 뒤쫓아 가 그 자리에 자본주의 말뚝 대신 사회주의 말뚝을 박고자 한,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인클로저(올타리치기)운동 프로젝트였다고도 볼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 유럽의 이념에 결정타에 가까운 영향을 미쳐 사회 다윈이즘(Social Darwinism)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물리학과 천문학이 지구를 우주의 한쪽 구석으로 쫓아냈다면 생물학은 사람의 지위를 신의 형상에서 직립한 별기병은 원숭이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원숭이에서 현대 백인종으로, 야만사회에서 유럽 문명사회로 이어지는 진화와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진화와 진보 이데올로기의 결정판이었다. 마르크스는 아시아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이 비유럽 지역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 착취와 폭력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지배를 언급하기보다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보, 필연의 역사로 받아들였다. 자본주의 유럽은 약육강식의 세계에 아주 잘 적용한 진화의 산물이며 월등하게 발전하고 진보된 문명이고, 비유럽은 생산력이 낮은 야만과 미개 사회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진보 이념을 퍼뜨렸던 수많은 이론가들과 선동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치 치하에서 일어난 재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확고한 어조로 우량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열등한 인종은 박멸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강제로 문명화시키거나 우월한 민족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나치가 학살한 유태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수의, 훨씬 더 많은 부족의, 훨씬 더 많은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 같은 진보이념으로 무장한 백인들에 의해 학살당하고 멸종당했다. 많게는 2천만으로 추산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과 태즈메니아인들,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은 진보를 빙자한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이었

다. 이 학살은 아직도 공식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고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20세기 초 한국에서도 진화론과 함께 진보이론이 수입되었다. 주로 중국의 량치차오(梁啟超)나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등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물론 백인 우월주의의 인종편견도 함께 수입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 이후 한 세기 동안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함께 진보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 되었다.

우파도 진보를 이야기한다. 먼저 그것은 진보 개념이 점한 의미의 '우월성' 때문인 듯하다. 진보의 반대 개념이 사전적으로는 퇴보일 텐데 퇴보를 환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층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니 생장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진보 또한 역사발전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에는 후퇴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 선형적 발전을 거부한다고 해서 발전과 후퇴의 변증법적 발전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으리라.

- 정운영, 「진보를 위한 변명 서설」, 『당대비평』, 2004년 가을, 79쪽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진화는 단지 변화일 뿐이다. 적응과 자연선택을 통한 변화일 뿐이다. 생명이 진화한 역사는 인류를 향해 진보한 역사가 아니다.

캄브리아기 생명 진화의 대폭발 당시 그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생명 창조적 다양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4억 4천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말기의 대멸종 시기에 갑자기 거의 대부분의 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리고 우연히 살아남은 특정 생명체들이 그 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해 오늘날까지 진화를 거듭해 왔다. 오늘날과 같은 인류가 출현해 우리같은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며 그 당시 대멸종 시기에 살아남은 생명체 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류는 진보의 꼭대기에 다달은 가장 우수한 종이 아니라 자연선택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 온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우리는 겸허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인류는 자신의 멸종을 포함하여 여섯 번째 대멸종을 스스로 주도한 것으로 화석을 통해 발언하는 아주 특이한 생물종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생명이란 진실로 우연이다. 폐자장에 있는 자동차가 30억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기다린다고 해서 우연히 새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바로 그렇게 우연치고는 기막힌, 진실로 경이로운 우연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더욱 소중하게 마음껏 누려야 할 지상의 축복이다. 인류의 탄생도 지극히 경이로운 우연의 소산인 것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무리생활을 선택한 인류는 약 6백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전대륙으로 퍼졌고 어쩌다 우연히 지상의 패자가 되었을 뿐이다. 흔히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지표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아니다.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한다. 사람만이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게 아니다. 한 예로 개미도 농사를 짓는다.

인류 역사 또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향해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진보의 역사가 아니다. 역사는 선택과 변화의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 때로 역사는 단속(punctuation)과 도약과 추락을 거듭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는 환경과 사회의 끊임없는 대화와 적응, 선택과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진보사관, 발전사관은 허상에 기초한 신념의 산물일 뿐이다.

오늘날 24시간을 일하고도 말할 수 없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현대인과 단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도 모두가 충분히 풍요로운 수렵채취인들을 견주어 볼 때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발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샬 살린스가 최초의 풍요한 사회라고 이름지은 수렵채취 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미개하고 야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역사에서 필연과 예정조화의 영역은 없다. 만약 신의 섭리가 있다면 신은 필연이라는 패를 고른 게 아니라 우연이라는 패를 잡았음에 틀림없다. 물론 농업이 발달해서 정착생활이 일반화되고 생산력이 높아지면 국가가 나타난다거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주기적으로 공황이 닥친다거나 하는 경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진화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것이 곧 그 사회가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바와 같은 고정된 역사발전 법칙, 민중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식의 유사종교와 같은 교의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역사는 인간과 사회가 수많은 자연요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요인의 착종이라는 조건과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그 길이 정해지는, 아주 풍부하고도 종다양성이 높은 숲과도 같다. 역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똑같은 조건이 또다시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똑같이 되풀이 되지 않는 불가역의 선택이다. 역사의 우연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중심 원리는 우연성(contingency)이며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다. 역사의 진행은 그 이전에 나타난 모든 상황에 의존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지배한다. 임의성과는 다른 그 우연성이야말로 역사를 비로소 무수히 다양하고도 풍부한 창조적 역사로 만드는 동인이다. 우연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개인과 집단, 사회와 국가, 그리고 공동체는 무수히 다양한 미래 가능성 가운데에서 힘있게 역사를 선택하고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 실제로 역사는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역사가 만들어진다. 현실은 끊임없는 역사선택의 결과이자 적응의 결과이며 미래 또한 아무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없지만 선택과 적응의 결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역사의 진행과 사건 또한 당연히 우연이 지배한다. 물론 이 말은 역사의 인과관계,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세르비아 청년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해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했는가, 왜 하필 그때 풍량이 불어 고려와 원나라의 일본 정벌 군사들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가, 왜 하필 그때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계획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군부 지휘관들은 신속하게 진압을 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는가, 그 까닭을 설명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우연이다.

우리는 이 우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는 비가역의 세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삶의 반영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유일한 개인이듯 특정 사회 또한 유일하며 역사의 사건도 오직 한 번만 일어난다. 어떤 역사 사건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현대 인류문명은 약 1만 년 전 농업을 발명하면서 정착생활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후 도시를 형성하고 문자를 발명하여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탑을 본격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백 년 전인 17세기에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오늘날의 현대문명이 급속도로 인간과 사회와 지구환경을 뒤바꾸어 놓은 그야말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경제생활에서 잉여가 발생했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진보가 이룩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이 진실이다. 수렵채취 사회에서 어느 시점인가 잉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경 사회가 나타났으며, 농업사회에서 비로소 잉여가 발생해서 풍요롭게 되었다고 산업사회로 변모되는 게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한 사회가 붕괴의 위기에 몰리고 극도의 결핍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탈피하기 위한 필사의 수단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문명 발생과 발전의 역사였음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조사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문명은 처음부터 자원을 얻기 위한 식민지 침략과 착취의 문명이었다. 다른 지역과 종족에 대한 침략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착취로, 이윽고 다른 생물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침략과 착취로 바뀌어 온 역사가 다름 아닌 문명의 역사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초입에 들어선 오늘날 이제 현대문명은 침략하고 착취할 다른 지역이나 대상조차 없어져 버렸다. 현대문명을 떠받들고 있는 자원도 모두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억 년 동안 땅속 깊이 묻혀 있던 과거의 햇빛에너지를 단기간에 무분별하게 모두 지상으로 꺼내 놓아버림으로써 재앙을 불러오고야 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게다가 수많은 화학물질을 지상으로 바다로 쏟아낸 결과 인간은 심각한 환경호르몬 질병에 노출되어버렸고, 이제는 물을 비롯한 모든 음식물조차 농약과 화학물질과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에 뒤범벅으로 오염되어 먹을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진보와 진보된 산업문명의 실상인 것이다. 진보의 결과인 현대문명은 자연과

괴와 자원고갈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다시 성찰하고, 다시 새롭게 해석해내고 거기서 심각하게 현재와 미래의 삶을 투영해보아야 할 까닭은 이 같은 현대 문명의 자기 파괴와 역사 자체의 종말에 대한 현실의 냉엄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필사의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자각 때문이다.

2. 해방 60년, 청산과 기념을 넘어선 역사 성찰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무엇을 청산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하는 데 있지도 않다. 우리의 과제는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그것도 단순한 이상과 이념의 선택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 지금,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럴듯한 주장과 구호는 난무해도 정작 차분히 미래를 책임지는 사회상과 전망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60년 동안의 '시련과 전진', 반세기의 역사선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자성해보는 거울을 한 번 비쳐보는 것은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비록 1997년 IMF 체제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겪긴 했지만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진 공업국가 반열에 우뚝 올라서 있다. 굳이 몇몇 지표를 들지 않아도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2003년)	6,052억 달러	세계 11위
경제성장률	3.1%로	OECD 국가 5위
수입액	1,938억 달러	세계 12위
수출액	1,788억 달러	세계 13위
외환보유액	1,554억 달러	세계 4위
1차에너지 총소비량	2억 1,200만 TOE	세계 10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4,424kg으로	세계 17위
자동차 생산량	318만 대	세계 6위

선박건조량	727만 CG/T	세계 1위
조강생산량	4,631만 톤	세계 5위
전자제품 생산액	698억 달러	세계 3위

쌀 생산량 13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1위, 인터넷 이용자 수는 세계 2위 등등등...

1953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국민소득 67달러(북한 53달러) 수준과 건주면 60년 사이에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통계 바로 밑 그늘에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 현재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2003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칭되는 빈곤자살자 수가 1,157명에 이르렀다. 하루 3명 정도가 순전히 가난 때문에 자식을 아파트 밖으로 내던지고 자신도 몸을 던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IMF가 터진 뒤인 1998년 처음으로 자살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앞지른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느새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두 배나 많게 한 해 1만 3천여 명의 자살자를 양산하는 자살공화국이 되어버렸다.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수, 100만에 이르는 단전단수 가구 수, 최대 6백만~7백만 명으로 추산하는 빈곤계층 등등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극단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는 너무나 많다. 20대 80의 사회가 아니라 IMF 이후 급격히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소수의 상층을 제외하고는 온국민이 빈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지경이 되었다.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개발과 성장의 길에서 망가지고 탈락한 것은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국토는, 한국의 자원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괴물이 저지른 극심한 폭력과 착취에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이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환경지속가능성 지수(sustainability index)는 세계 122위에서 136위로 최하위권이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세계 1위권이며,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농업오염도도 1위권이다. 게다가 식량자급률은 26%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런 땅덩어리를 놓고 또 국민의 상위 1%가 국토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위10%의 국민들이 74%의 땅을 가지고 투기놀음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양극화와 불평등, 건설족만을 살찌우는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의 투명도(부정부패) 지수는 50위 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람이 살만한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살벌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신자유주의와 IMF 때문인가. 물론 IMF를 통해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월가 투기자본이 미숙한 한국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단기간에 국가의 부를 이전해 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 금융자본이 주식회사 한국을 장악하면서 주주자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이윤을 해외로 유출해가는 구조

가 정착되었고 그 결과 한국 사회가 고용불안과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아무런 정책역량이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장기 전망 없이 무분별하고도 급속하게 도입한 역대 민주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정부의 무능력과 무력함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심한 정도를 넘어서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지경이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긴 뒤 한국민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 왔다. 한국민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한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일제가 한국민들에게 삶의 풍요와 행복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져다주었다면 아마도 독립운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일제는 한국민들을 학살하고 강제로 땅과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침략자들일 뿐이었다. 일본의 자본주의 근대화는 그 자체 서구의 진보와 자본주의 근대화를 복사한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이 근본 이념이자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일본의 부국강병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음에도 미국의 세계전략과 냉전질서에 힘입어 또다시 한국전쟁의 피를 자양분으로 기적의 경제회복을 이룩해낸 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진보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부국강병책을 써야 한다고 확신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은 진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독립과 진보에 대한 확신은 처음부터 자주독립된 한국 또한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렇게 되도 좋다는, 거대 진보이념과 거대 국가주의의 짝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마침내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한국민들은 비로소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세운 두개의 군사정부였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민의 염원과 능력과는 전혀 별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시켜 놓고 냉전의 최전선 각축장으로 삼았다. 바로 이 사실이 지금까지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임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소련의 주된 관심은 한국민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변영과 발전이 전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전후 세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권, 자신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정권이 한반도에서 유지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래서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에 대해 명백한 인종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스탈린이 수십만의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야만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국민들은 적어도 40년 동안은 미국(과 연합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야만(!)의 주장을 한 것 등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분단은 한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분단은 철저히 미소 양 강대국이 한민족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분단의 비자주성은 이후 남북한의 민주주의를 허울뿐인 민주주의로 만들었고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철저히 비자주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만들었다. 미국과 소련은, 특히 미국은 식민모국의 제국주의 국가로 기능한 측면이 다분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한국의 미 대사관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총독기관이었으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보호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왔다.

분단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또한 한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전쟁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일부의 수정주의 해석이 일정하게 한국민의 내전을 강조하고, 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남침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근본 뿌리를 따질 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만들어낸 전쟁이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 군수산업의 시장 상실을 한국전쟁을 통해 단번에 상쇄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과 한국전쟁의 비자주성은 그에 뒤이은 두개의 체제를 그냥 남북이 스스로 선택한 두 개의 체제가 아니라, 각기 미국과 소련을 대리하는 극도로 적대하는 두 개의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대립과 갈등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멸망이 곧 자신의 존립근거인 상시 전쟁상태의 두 적국, 에일리언같은 두 개의 괴물 국가를 태어나게 강요했던 것이다. 남북의 독재정권은 두 개의 대형(Big Brother) 국가로 자리잡아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미소의 냉전체제에 빌붙어 연명을 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분단체제라고 명명되기도 했던 이 같은 두 개의 적대 정권은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질실히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 있었다. 사실 분단체제라는 이름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외세의 규정성을 제외한다면 분단체제야말로 남북의 독재정권에겐 가장 바람직한 현상유지 체제였다.

미국과 소련은 또한 한국민 가운데 자주와 자립을 외치는 민주주의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기도 했다. 말이 제거이지 그것은 가혹한 고문과 살인과 그리고 400만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망자를 의미하는 끔찍한 제노사이드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란 이렇듯 아메리카 원주민, 한국인들, 베트남인들을 끔찍한 제노사이드로 학살하면서 '진보'하는 피의 민주주의와 진보이며, 이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일이다.

제거 이후에 미국이 한 일은 친일파처럼 친미파를 양성해내는 일이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미국의 무기와 미군 지휘 하에 훈련받고 양성된 한국 군대는 아예 자치하고, 해방 후 지금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수십만의 한국인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고한 지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유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친미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십만의 미국유학 출신 친미파들이 한국의 지배 계급이 되는 현실은 왜 198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반미운동이 없었는지, 아니 왜 한국에서는 반미를 외치기만 해도 곧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만 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압축 고도성장과 압축 민주화는 이처럼 비자주성의 규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는 당시 들판의 불길처럼 고조되어 가기만 하던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이 수립한 계획과 지침과 강한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이 같은 비자주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5.16군사쿠데타와 경제개발계획, 그리고 한일회담을 둘러싼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실제로 남한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 당시에 사회주의 북한은 전후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1960년 북한의 1인당 GNP는 137달러(남한은 94달러)였고,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북한에는 보릿고개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을 평가절하 하자는 뜻이 아니다. 한국인의 잠재력과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능동성이 눈부신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는 점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비자주성이라는 강한 외부의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1997년 IMF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입증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자주자립의 민주주의와 민족경제를 단순한 반미의 구호로 환원시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망으로 선택하는 것도 근시안의 대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강한 지배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의 강한 지배력이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친일 부역자와 마찬가지로 마치 미국이 자신의 조국인 양 행세하는 친미 민족반역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자주자립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한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의 역사전쟁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 질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한국이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분명한 긍정의 선택과 함께 미일중소 시민사회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소의 국제질서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

른 새로운 모색을 시도할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경제발전과 고도 경제성장, 과거와 같은 노동력 착취와 자연 착취의 개발과 진보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만 할 가치인가라는 점을 냉철하게 따져보자는 것이다.

1960년대로부터 채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 사회는 민주주의와는 담을 쌓은 독재 왕조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기아로 사망한 주민들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고, 탈북자들이 만주나 동남아까지 유랑하고 있으며, 5호담당제와 같은 극도의 감시와 폭력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그런 사회와 국가는 이미 사회 또는 국가로서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풍요를 구가하는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차상위계층까지 빈곤층이 700만이나 되는 그런 사회와 국가는 이미 공동체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해방 후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제도만 달랐을 뿐 공히 부국강병의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근대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수행했다. 그런데 그 중 한쪽은 사회주의 몰락 후 사회주의 강국들의 경제 지원이 끊기자마자, 그중에서도 에너지 공급이 끊기자마자 모든 경제부문이 붕괴되면서 사회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한쪽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열매와 풍요를 과시하다가 IMF를 통해 미국이 순식간에 코도 안풀고 국부를 몽땅 가져가 버리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뒤에는 수많은 실업자와 빈곤자살자를 양산하면서 급속한 양극화와 함께 또한 사회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은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부르짖고 있으며, 남한은 여전히 세계화와 주가지수와 수출증가율과 연간 몇 %의 경제성장에 목을 매달고 있다. 지금은 연간 몇 %의 경제성장이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진대거나 하지 않음에도 아직도 이같은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흔히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동반 성장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본 성격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장이 아니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로스토우식 경제개발은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구체화되면서 1980년대까지 민주주의를 압살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수출주도의 외형 성장 전략은 노동력과 자연의 착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출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기름진 토양이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1992년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태국의 민주화운

동, 1998년 수하르토를 물러나게 만든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운동 등은 경제발전의 정도에 상관없이 독재와 억압, 착취와 비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비자주성이라는 외부 제약을 깨고 한국인 스스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점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의의이자 성과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이야말로 비로소 한국인이 한국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본래 뜻대로 강한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고, 때문에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립경제, 민족경제라는 대안 이념을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은 그 자체 새로운 자주 자립의 민주사회를 추구하는 강한 이념을 형성하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오랜 군사독재정권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강한 국가권력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싸워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은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해방시키는 것과 함께 권력을 소수의 군부나 엘리트로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비록 수많은 다양한 주장과 의견, 이데올로기가 착종하긴 했지만 단순히 체육관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자는 프로젝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에서부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고자 한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운동이었다. 때문에 민주화운동은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다.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같은 민주화운동의 만인 평등 추구하고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의 일부가 정권을 3번이나 잡았는데도 오히려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었고 여전히 개발독재의 광풍이 전국토를 휩쓸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지상주의만이 판을 치고 있다. 박정희 시대보다도 더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박정희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박정희를 미화하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전도된 역사의 역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역대 민주정부의 무능과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그런 민주화운동의 시대는 갔다. 그와 함께 개발독재의 미친 시대를 거역하던 강력한 비판자도 사라져 버렸다. 자립경제와 민족경제론이라는 대안 이념은 흔적도 없이 낡은 사회주의 이론의 변종으로 폐기처분되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했는가. 남한만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회, 우리의 국토와 자연의 실상을 돌이켜 살펴보고 새로운 생태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전혀 다른 측면이 보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과 성장은 사상누각의 환상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사례는 단순히 자립경제의 실패 교훈만이 아니다. 에너지 자원 공급이 끊길 경우 진보고 근대화고 경제성장이고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실증의 사례이기도 하다. 당장 식량만 해도 그렇다. 여전히 화학농법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그래도 쿠바는 구소연방의 석유공급이 끊기고나 서 유기농으로 전환해 적어도 식량만큼은 자급자족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세계화된 경제도 그것이 자원착취의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한 자원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는 혼란과 아노미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우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3.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진보의 환상에서 빠르게 깨어날 필요가 있다.

모든 문명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자리잡고 있다. 그 옛날 수메르문명은 에너지원인 숲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결과 마침내 멸망으로 치달았다. 마찬가지로 현대문명도 에너지원인 석유를 단 몇 백년 만에 미친 듯이 마구잡이로 퍼다 써버려 이제 석유재앙 5분전의 파국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특히 나무를 소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석유를 비롯한 자원 낭비는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유독성 화학물질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 모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평양의 이스터섬 사람들은 섬에 있던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었기에 200여개나 되는 모아이 거석문명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소나무 숲을 베어낸 결과는 참혹했다. 마침내 소나무 숲이 사라지자 섬의 생태계는 교란되었고 동물들도 사라져 버렸고, 새들도 사라져 버렸다. 자연히 남는 것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과 전쟁과 그리고 끔찍한 카니발리즘(식인풍습)이었다. 우리는 이스터섬의 교훈을 아예 모르거나 잊고 지낸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스터 섬의 소나무숲이 얼마 남아 있지도 않다. 화전민들처럼 몇 해 농사를 짓다가 다른 숲으로 이동할 그런 숲은 이제 아예 없다. 그러기에는 인류는 지구상에 너무나 뻣뻣하게 들어차 있다. 채취할 자원도 이제 거의 거덜나 버렸다.

진보의 가장 위험한 환상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맹신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오로지 무한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국가라는 공통의 지원을 받아 마치 우주 행성개발이 대안인 것처럼 헛된 꿈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지구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행성이며 대체불가능하다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에너지 문제는 수소혁명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소는 자연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소를 생산하고 이동하고 이용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너무도 간단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생명공학자들은 마치 유

전공학이 식량문제의 해결책이자 질병을 극복하고 인간의 불로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마법램프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극단에 다다른 과학기술과 진보의 이념, 진보의 인간관과 생명관을 적나라하게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교묘한 과학민족주의를 이용해 생명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731부대의 마루타 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시도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상의 생명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신비이며 대체불가능한 것이다. 도대체 14일 이전의 미성숙 수정란이 생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돌덩이나 쇠붙이란 말인가. 생명을 인공으로 키워 다른 생명의 치료용으로 마구 잘라다 쓴다는 그 끔찍한 발상에 열광하는 이 전도된 현실이 바로 진보의 모습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사회나 집단, 개인의 현명한 적응과 깨어 있는 선택이다.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능동적 창조력으로 변화시키고 역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과학기술과 진보에 대한 맹신에서 깨어나는 길은 결국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자각뿐이다.

무슨 근대화나 근대성이니 근대의 담론이니 하는 말들은 따지고 보면 산업화의 방향은 피할 수가 없는 역사의 법칙이 아니냐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지극히 자연스런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은 진화의 맨 꼭대기에, 인류의 문명, 특히 서양문명은 진보의 최첨단에 있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근대화나 진보는 환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근대화와 진보는 몇 백만 년 인류 역사상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짧은 몇 백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지구가 비축해 놓았던 햇빛에너지를 그야말로 단기간에 약탈해서 마구잡이로 낭비한 결과로 얻어진 예금통장 까먹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금통장이 이제 바닥이 나버리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삶의 방식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지금 이 순간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파산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현대 문명의 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바닥에는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에, 사회가 움직여지는 그 방식 자체에 위기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있다. 모든 문제는 사람 그 자체에 있다. 사람이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이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범죄자이다. 그리고 모든 대안과 해결책 또한 사람 자체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계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물론 계몽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각성과 삶의 방식 전환은 자율과 자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생태적 전환과 각성은 저항의 민주주의와 참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자립과 자치의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제 진보의 이름으로, 당위나 법칙으로 환원해오던 낡은 습관과 낡은 구호를 버릴 때가 왔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이제 새로운 자립과 자치의 민주주의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간난신고를 헤치고 나온 1970년대, 1980년대의 그
슬한 민주화운동 투쟁과 사건들을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도 못한다. 민주화운동 하
면 와이에스나 디제이, 좀 더 나아가봤자 몇몇 유명한 이름들을 거론하고 고난에 찬
투쟁이라는 상투어 몇 마디 던지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그러나 1970, 80년대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비리와 부패와 독재를 없애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정의의 공동체를 만
들기 위해 싸웠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행위와 사회 정의
를 위한 행위는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이란 곧 새로운 대안
의 인간관계, 새로운 대안의 사회정의와 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였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선택의 무대 전면에 이 같은 일반
민중의 삶의 숨결을, 그 생생한 삶의 육성을 되살려 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지배자,
강자 중심의, 죽어가는 그들의 진보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 있는 우리들의 역사,
생태적 전환과 각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 선택의 어찌면 유일한 길일 수 있다. 그것
이 오늘날 슬한 혼돈 속에서 도무지 밝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나마 세
워 볼 수 있는 어찌면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른다.